

“야 경선 정책은 없고 주술 논쟁만”

민주, ‘윤 손바닥 왕자’ 맹비난 국민은 사머니즘 정치 싫어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의원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바닥의 ‘왕(王)’자 관련 비난을 이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 경선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제1야당 경선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주술 논쟁만 한창이니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손바닥에 왕(王)자를 긋고 나오는 후보, 빨간 속옷만 입고 다닌다는 후보, 점쟁이 말을 듣고 이름을 바꿨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점쟁이 말을 듣고 이름을 바꿨다는 후보 부인마저 있다”고 한 뒤 “참으로 전근대적이고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주술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윤 전 총장이 주술 논란에 휩싸인 것도 모자라 ‘손가락 위주로 씌는’다는 치졸한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언사를 멈추어야 한다”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을 보면 윤 전 총장은 이미 너무 큰 도둑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당 후보들도 미신을 믿는 후보라며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술에 의존하는 사머니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정책경쟁이 아니라 주술경선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정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권주자들과 캠프도 공세에 가세했다. 이재명 캠프의 정진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캠프가 대선판에서 막무가내의 ‘무당춤’을 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캠프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기징역’ 운운하며 대통령 선거를 이진투구로 몰아넣고 있는데, 유명한 무당으로부터 지시받은 왕(王)자 부처이 발각돼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민주당 1위 후보를, 터무니없는 무기징역 타령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무당 스승을 모시고 지도자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후보다운 언행을 새로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도 하지 말아야 했다”며 “손바닥에 뭘 쓰고 다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꿈꾸는 것이 난센스”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윤 전 총장 황소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라고 설명한 뒤 “윤 전 총장 연수원 동기라 알려진 재판장이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모는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검찰과 사법부, 기울어진 언론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이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본인이 왕이면 그럼 국민이 졸(卒)이나. 헌법 1조도 잘 모르는 정신을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나”고 꼬아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대장동 피켓’ 대결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오른쪽)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을 들고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직원 이용 불법 지방선거운동 검찰 고발

전남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 선거 이후 보에정자 A씨와 소속 직원 B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소속 직원 B씨를 하여,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출마 의사 및 업적 홍보, 여론 조사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보통신의 방법(대량 동시 발송)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

거범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또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보통신의 방법을 쓸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힘 2차 컷오프 4등 관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8일)이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4등으로 본경선에 턱걸이 진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최소 3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등 전망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당 사무처 관계자는 5일 “누가 4등에 오를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두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표가 1·2등 주자로 몰려, 상대적으로 4·5등도 간발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4등 후보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자전 타천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불법하도급 6년새 954건, 공사가액 6200억

김희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 공사금액은 6200억원에 달했다.

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7.1~22) 때 현장 10%(134곳 중 1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불법하도급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하도급 사건은 이보



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하도급 공사금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4억원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금액은 2019년 854억원, 2020년 992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01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금액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수술 적발 의료기관, 전문병원 유지 문제

김원이 국회의원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인천의 한 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의 의



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낮은 전력자급률 비용 지방 소비자에 전가

신정훈 국회의원

수도권의 낮은 전력자급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지방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한해에 2300억원 꼴이 소요된 것이다. 특히 2013년 245억원이던 투자지출액은 2014년에는 무려 7배 가까이 급증하고 2018년에는 4440억원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4년부터 본격화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전력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지출이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 인해, 전력계통 비용은 상승하고 총괄원가에 반영되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의 전기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구조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h3>장성 토지 (매매 분양)</h3>	<div style="text-align: center;"> <h1>광주보청기 난청센터</h1> <h2>보청기</h2>  <h2>무료체험</h2> <p>직접 체험 후 결정!!</p> <p>☑️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p> <p>☑️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p> </div>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3) 140평(분양) 시세 9억</p> <p>매가 7억(용 4억)</p> <p>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총 1760평</p> <p>(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